■ 혼돈의 북핵 사태… 우리의 선택은

김 동 신 前국방장관 특별인터뷰

"지금은 北압박 위한 강한 채찍 필요"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국내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유엔 제재 참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둘러싼 안보공방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광주일보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내고 국민의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을 역임, 누구보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햇볕정책의 성과를 잘 알고 있는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상황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시간여동안 이뤄졌다.

북, 핵보유 직전의 심각한 상황
국민 결집·외교적 노력 절실 할때
당리당략 정쟁 일삼는 정치권 실망

국제 공조 위해 PSI 참여 마땅
'핵포기땐 더 많은 이득' 암시 줘야
전작권 이양 시기 못박는 것은 잘못

김 전 장관은 "북한은 현재 핵 보유 직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인식 아래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근과 채찍의 강온전략을 주문하면서도 "현 시점은 당근보다는 채찍, 즉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할 때이며 이와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측에 핵 포기시 받을 수 있는 달콤한 당근에 대한 암시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 실험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응 자세를 평가한다면.

▲정부는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북한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북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을 결집시켜야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갈팡질팡한 태도와 함께 취약한 위기관리능력을 드러내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정치권은 북한 핵 실험 문제를 당리당략적 시각으로 접근하며 정쟁 양상을 보여 사회의 분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준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방침이다. 기존의 외교안보 라인의 현실 인식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보다 현실적인 안목을 가진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에 포진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의 대북전략 및 정책은 북한의 핵이 없다는 가정 아래 세워진 것이므로 안보, 대북정책은 물론 5027 작전계획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재래식 전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2020 국방계획의 수정도 필요하다.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풀고 한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많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핵 실험에 나섰다는 너무 낙관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단순하게 미국의 금융제재 등을 풀기 위해서 체재 존립 문제까지 위협받는 핵 실험에 나섰겠는가. 오히려 북한은 겉으로는 북한 핵 실험 포기 가능성을 흘리며 국제사회 분열과 한국 사회의 분열을 유도하면서 안으로는 핵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을 보유하려 한다고 보는가.

▲지난 80년 이후 시작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느낀 북한이 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 등을 위해 핵 보유에 나선 것이다. 마치 중국이 1950년 중반 이후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에 나서 단숨에 국제사회의 강국으로 떠오른 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 제재로 단기간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남한에 비해 군사적 우위에 서는 것은 물론 체제 유지에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최근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협상이었다. 한국군의 능력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기간을 못 박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핵 실험 사태에서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야 했다. 정부에서는 핵억지력 (extended deterrence)이란 문구를 새롭게 추가,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북한 핵 사태와 관련 미군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최근 주한미군장병 위로행사장에서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난 적이 있다. 이때 벨 사령관은 SCM의 주된 내용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 협조 및 방위비 분담 건이었으며 핵우산 문제 등은 별다른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게 전했다. 또한, 지난해 SCM에서 한국측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핵 우산 조항을 빼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핵우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미군 관계자들이 냉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유엔회원국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인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대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PSI는 러시아 등 세계 70여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참여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SI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UN안보리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에 PSI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참여해야 한다.

-PSI 참여와 국제적인 제재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너무 보수적인 전략이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안보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몰아붙이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한 대북 라인과 외교 라인을 총 가동, 북한 측에 핵을 포기하면 돌아갈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리비아와 남 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핵을 포기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한미관계를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한미동맹 관계가 굳건했다.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하다는 것은 그만큼 안보상황이 굳건하다는 뜻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을 수행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햇볕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참여정부의 한미동맹은 역사상 최저점에 있다. 참여정부는 초반부터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아젠다를 내 놓는가 하면 자주노선 등을 주장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쳤다.

-핵 실험 이후의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평가한다면.

▲핵실험 이전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어느 정도 균형에 가까웠다.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화생무기,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으로 북한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핵 보유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2차 핵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비핵화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전체가 핵 무장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빚으며 동북아 정세를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력: ▲광주 출생 ▲광주일고 ▲육군사관학교 졸업 ▲51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33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민주당 광주 북갑 지역위원장

현장과 시각

달러 약세 버텨내려면…

이종태 경제부 차장

요즘 광주·전남지역내 중소 수출업체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에다 '약(弱)달러·약(弱)엔'으로 인해 수출해봤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1천600여개의 수출관련 중소업체 가운데 올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360여개에 불과하다는 지역 통계자료만 봐도 저간의 '끔찍한' 수출상황을 가늠케한다.

문제는 내년에도 수출상황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제단체가 내놓은 내년 자료마다 '달러 약세가 지속돼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져나온다.

지난 2·4분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채산성이 무려 7분기 연속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화절상의 부담은 납덩어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수출 고전'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실패한 시장개입을 든다.

재경부는 2003년 9월부터 환율방어를 위해 환율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시장개입에 본격 나섰다. 당시 재경부는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달러를 대량 사들였으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시장개입용 실탄으로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정부는 2004년 10월 시장개입을 포기했고, 이런 쓰라린 경험이 환율하락을 방치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정부탓만 할 수도 없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수출보험공사 등 관련기관들이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환변동세미나에 참석하는 지역내 중소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환위험 회피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업체도 360개 업체의 16%인 61개 업체에 불과하다. 나머지 업체는 환변동에 따른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환변동보험은 말 그대로 기업들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면 계약금액을 원화로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 것과 같다. 환변동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950원선에 머무는 요즘이 환변동보험 가입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환율저점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950원선을 웃돌 경우 기업들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지만, 경제단체의 전망처럼 900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jtlee@kwangju.co.kr